비명계 "도의적 책임, 그게 인간" 사퇴론에…이재명, "檢 때문"

윤영찬 "李, 도의적 책임져야 인간"
이재명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故) 전형수씨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퇴론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검찰 수사에 돌리며 사실상 사퇴를 일축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대표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와 관련한 일로 수사를 받거나 고발인이 된 상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고인이 되신 분이 네 분"이라며 "모두 이 대표를 충직하게 모셨던 이들이다.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고 삶의 이유인 가족을 떠나야 할 만큼, 그분들을 고통에 빠뜨렸던 원인이 대체 무엇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말한 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면 속히 밝혀야 한다"면서도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씨는) 십 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라며 "한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과 연관된 이들의 계속된 죽음. 이런 일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충격적인 일이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당내 한 중진 의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죽음의)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 대표와 지도부가 사람이 죽어 나간 불행한 사태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당과 대표가 침묵으로 있는 것이 적절하다. 검찰의 핑계를 대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도 지적했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인간적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도의적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은 명백한 본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태는) 당과 대표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당 대표의 일을 왜 민주당이 책임지고 가나. 그건 다 같이 죽는 길"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주말에 벌어진 일들이라 추후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3선 의원은 "이런 비극적인 문제조차도 진영 논리화되는 것이 안타깝다. 고인의 명복부터 빌어야 한다"며 "(이번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된 전씨 역시 유서에서 "(이 대표가)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오는 14일 토론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대선 1년 대한민국과 민주당'이는 주제로 당의 활동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반면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검찰 수사에 돌리고 정부 규탄 일정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사퇴론'을 일축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장외투쟁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4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장외집회에 나섰다.

그는 지난 10일 경기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인가"라며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정치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인가.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나"라며 "그야말로 광기다.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친명계도 이러한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당 강성 모임인 '처럼회' 소속 황운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검찰 직접 수사권 완전 폐지 말고는 답이 없다"며 "검찰이 수사의 이름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나. 이제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기도한다"며 "우리 모두 성찰해야 한다"고 했다.

그간 당내 일각에서는 지도부의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측근의 죽음으로 이 대표에게 겹악재가 겹치자, 계파를 떠나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8일 라디오에서 "이 대표와 지도부가 이 당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다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 당직 개편도 방법"이라며 "지금 최고위원을 포함해 정무직 당직자, 사무총장, 전략기획위원장 등 여러 당직이 완전히 (친명) 일색"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주요 당직을 바꾼다고 해서 당 대표 기조가 바뀌겠나"라며 "(비명계에서) 공천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이슬 기자

민주 광주시당,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 개최

김건희 주가조작·50억클럽 특검 수용 촉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지난 11일 5·18민주광장(구 전남도청)에서 '윤석열 정권 야당탄압 검사독재 친일본색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이병훈 위원장(동구남구을 국회의원)과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나주화순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청래, 박찬대, 임선숙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및 핵심당원 등 약 1,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 위원장과 최고위원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의 릴레이 규탄 발언과 규탄결의문 발표 피켓운동, 구호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 됐으며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능, 민주주의 파괴를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당원 일동은 규탄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나라와 국민의 신음을 깊어져만 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이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치솟은 물가는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검찰의 권한을 사적 권력으로 남용해 독재정권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정적제거와 야당탄압 일삼는 수사는 명백한 검찰공화국의 정치행위다"고 비판했다.

또"윤석열 대통령은 제104주년 3·1절 경축사를 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의 명예를 훼손하며, 친일 본색을 드러냈다"며, "국민은 윤석열이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건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협찬 의혹이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 된 것과 곽상도 아들의 50억 퇴직금이 뇌물죄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예로 들며 "민주당은 김건희 주가조작과 50억 클럽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재환 기자

황예원 광주 북구의원,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자살 예방 사업 촉구

재발 방지·심리적 안정 위한 상담 중요성·정서적 지원 필요성 강조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예방 사업의 추진을 요구하였다.

황 의원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7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였다."며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서 공공요금인상과 금리인상의 여파는 자살률 추이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는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이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41.9% 증가하여 자살 동기 요인 중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자살률 또한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자살을 한 번이라도 시도한 청소년 자살시도율은 2020년 광주·충북·전북이 2.4%로 가장 높았고, 모든 지역이 전년 대비 자살시도율이 감소하였으나 광주만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청 변사자 통계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황 의원은 본인이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한 고등학생의 부모와 인터뷰한 내용도 소개하였다.

학생은 투신 시도한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등 여러 과와 협진하여 신체적·심리적 치료를 받았으나, 가족의 어려운 형편에도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고 많은 부분을 부모가 감내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황 의원은 "재발 방지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의 중요성과 가족들의 정서적 지원 필요성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며 ▲대상군 각각에 적용가능한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프로그램 발굴과 자살 인식 및 태도 등의 변화 추이를 파악한 체계적 접근방법 모색 ▲자살시도자 외 가족, 목격자 등에도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 및 기존 제도의 보완과 포괄적인 지원체계 강화 ▲지역사회 기반을 연계한 경제적·정서적·심리적 안녕 도모와 촘촘한 제도 마련 등을 주문하였다.

황예원 의원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슬비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